

기획재정부		보도자료	
보도일시	2021. 10. 12.(화) 10:00	배포일시	2021. 10. 12.(화) 8:00
담당과장	재정혁신국 재정건전성과장 박철건(044-215-5740)	담당자	김영웅 사무관 ssuper84@korea.kr
	세제실 조세분석과장 최영전(044-215-4120)		김선영 사무관 ksunny3@korea.kr
	재정관리국 재정집행관리과장 김완수(044-215-5330)		정지운 사무관 jiun.chung@korea.kr
	국고국 국유재산정책과장 강대현(044-215-5150)		김경중 사무관 rudwnd@korea.kr
	국고국 국채과장 김이한(044-215-5130)		최현화 사무관 hyunhwa@korea.kr
	공공정책국 평가분석과장 유형선(044-215-5550)		최시훈 사무관 choisihoon@korea.kr
			송윤주 사무관 teruwith@korea.kr

「월간 재정동향 및 이슈」 2021년 10월호 ('21.8월말 기준)

- ◇ 8개월 연속 세수와 재정수지 개선세가 유지되고 있으나, 세수증가세는 둔화
- ◇ 2차 추경사업 중 코로나 피해지원 3종 패키지를 적극 집행 총 4,679만명에게 14.8조원 지급 완료(10.6일 기준)
- ◇ 외국인 국고채 순투자가 역대 최고수준을 기록하는 등 국제사회는 우리 경제의 탄탄한 펀더멘탈에 대해 높게 평가

- 기획재정부는 「월간 재정동향 및 이슈」 10월호를 발간하여 재정운용 동향 및 주요 재정사업 성과 등 발표
-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은 코로나로 인한 민생경제의 어려움이 지속되는 만큼 민생과 직결된 재정집행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으므로,
 - 2차 추경사업 중 코로나 피해지원 3종 패키지를 관계부처가 합심하여 10.6일까지 14.8조원을 지급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국민들에 대한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,
 - 상생국민지원금과 관련하여서는 이의신청을 하시는 국민들을 적극적으로 구제하여, 최대한 지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힘

□ 한편, 미국 테이퍼링 가능성 등 글로벌 시장의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상황 속에서도 최근 국채시장에서 우리경제에 대한 해외투자자들의 견고한 신뢰를 재확인하였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

- 외국인 국고채 순투자가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, 외국인의 국고채 보유잔액이 150조원을 최초로 돌파하였으며,

* 外人 국고채 순투자(조원) : ('17)+5.3 ('18)+8.4 ('19)+12.0 ('20)+23.3 ('21.1~9)+33.0
外人 국고채 보유잔액(조원 기말): ('17)77.8 ('18)86.3 ('19) 98.3 ('20)121.6 ('21.9월) 154.6

- 특히, 유로화 표시 외평채를 10.7일에 작년에 이어 마이너스 금리 발행에 성공하는 등 외평채를 성공적으로 발행한 것은 우리경제의 탄탄한 펀더멘탈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식을 반영한 것이라고 평가

* 13억불 규모 발행(달러화 5억불<발행금리 1.769%> + 유로화 7억유로<발행금리 △0.053%>)

□ 앞으로도 재정의 적극적 집행을 통해 소상공인 피해지원, 취약 계층 고용 확대 등 민생경제 활력을 제고하고, 금년 경제성장을 전망치를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,

- 이를 위해 4분기에도 이불용 최소화 등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통해 경기회복 흐름을 이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힘

【'21. 8월(누계기준) 재정운용동향】

◇ (총수입) 국세수입(248.2조원) 등 397.5조원(전년동기대비+79.7조원*)

* (국세)+55.7 (세외수입)+1.9 (기금수입)+22.1조원

- 8월에는 기저효과 감소 등으로 세수증가세가 크게 둔화

◇ (총지출) 코로나 피해지원 등 427.3조원 집행(전년동기대비+38.6조원)

- 8월부터 국민지원금 등 2차 추경 주요사업 등이 원활히 집행되어 전년동기대비 진도율은 전월대비 빠르게 개선
(△1.8→+0.6%p)

◇ (재정수지) 통합재정수지 △29.8조원(전년동기대비 +41.1조원)

- 재정적자는 전년동기대비 58% 대폭 축소되는 등 재정수지 개선

□ **(총수입, 397.5조원)** 증가세는 유지되고 있으나, 세정지원 기저효과 소멸 등으로 세수 증가세는 크게 둔화(7월 +6.3조원 → 8월 +0.6조원)

○ 자산시장 안정화, 코로나 재확산에 따른 거리두기 강화 등 세수 불확실성은 상존

❶ (국세, 248.2조원) ①경기 회복세, ②자산시장 호조, ③기저효과·우발세수 등으로 전년동기대비 진도율 +11.6%p 증가(+55.7조원)

- 경제지표들(민간소비, 기업 영업이익, 상용근로자수 등)이 추경시보다 개선되어 세수 증가세가 유지되는 모습

< 전년대비 세수 증가원인 >

① (경기회복) 경기 회복세가 지속됨에 따라 인해 법인세(+13.1조원), 부가가치세(+8.3조원) 등이 전년동기대비 +28조원 증가

* 코스피 12월 결산법인 영업이익(조원, 개별기준): ('19) 56.3 → ('20) 67.5 <+19.8%>
('20.上) 29.6 → ('21.上) 50.1 <+69.1%>

② (자산시장 호조) 부동산·주식시장 등 호조로 양도소득세(+10.3조원), 증권거래세(+2.2조원)·농특세(+2.3조원) 등이 전년대비 +17조원 증가

- 다만, 최근 부동산·주식거래 증가세는 둔화 움직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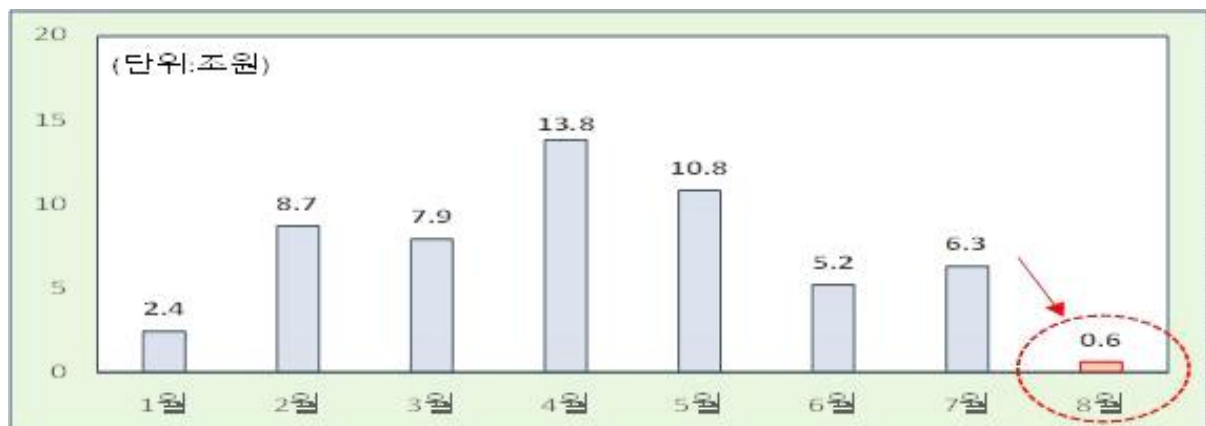
* 주택매매거래량(만호, 전년비): ('20.11~'21.6월)81.6(△1.8%) (7월)8.9(△37.1%) (8월)8.5(+4.4%)
증권거래대금(조원, 전년비): ('20.12~'21.6월)4,413(+80.9%) (7월)579.6(+5.6%) (8월)576.7(△7.0%)

③ (기저효과·우발세수) 세정지원 기저효과(+7.7조원), 상속세 등 우발세수(+2조원)로 인해 전년대비 +11조원 증가

* (5월) +11.1조원 (6월) +13.3조원 (7월) +11.9조원 (8월) +7.7조원(△4.2조원)

- 다만, 세정지원 기저효과 소멸 등이 작용함에 따라 8월 기준 전년대비 세수 증가규모가 크게 감소

전년대비 세수변동 규모(당월기준)



② (세외수입, 19.5조원) 경기회복세 등으로 전년동기대비 진도율은 +1.1%p 증가(+1.9조원)

- 공장가동률 확대에 따른 원유수입 증가*로 에너지특별회계 부담금** 수입이 증가(+0.1조원) 하는 등 경상이전수입 확대(+0.2조원)

* 원유 수입(누계)은 '21.8월 기준 전년동기대비 6.7억배럴 증가

**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수입·판매 부과금

*** 한은잉여금(+1.4조원), 일반회계 정부출자수입(+0.3조원)은 세입조치 완료

③ (기금수입, 129.7조원) 사회보장성기금 자산 운용수익 등 재산수입 (+16.8조원), 사회보장기여금(+2.9조원) 증가 등으로 전년동기대비 진도율 +11.1%p 증가(+22.1조원)

- 주식시장 호조로 국민연금 자산운용수익이 전년동기대비 14.9조원 (12.7 → 27.6조원, +116.8%) 증가

* '21년 7월말까지 국민연금 운용수익률은 8.55%(전년동기대비 +5%p)

- 전국민 고용보험 추진에 따른 고용보험 가입자 수 증가 등 사회안전망 확충으로 사회보장기여금은 전년동기대비 2.9조원 증가(49.4 → 52.3조원)

* 고용보험 가입자 수 증감(전년동월대비, 천명) ('21.3)324 → (4)422 → (5)443 → (6)462 → (7)485 → (8)417 (8월 말 기준 가입자 1,443.6만명)

(단위: 조원, %, %p)

	'20년						'21년(잠정)				전년동기 대비			
	추경 (A)	결산 (B)	8월 (C)	8월 (누계D)	진도율		2차 추경 (G)	8월 (H)	8월 (누계I)	진도율 (J=I/G)	8월 (H-C)	누계 (I-D)	진도율	
					추경 (E=D/A)	결산 (F=D/B)							예산 (J-E)	결산 (J-F)
□ 총수입	470.7	478.8	37.4	317.8	67.5	66.4	514.6	40.6	397.5	77.2	3.2	79.7	9.7	10.9
◇ 국세수입	279.7	285.5	24.0	192.5	68.8	67.4	314.3	24.6	248.2	79.0	0.6	55.7	10.2	11.6
○ 일반회계	271.9	276.3	23.4	186.9	68.8	67.7	304.6	24.0	240.3	78.9	0.6	53.3	10.1	11.2
- 소득세	88.5	93.1	9.5	58.4	66.0	62.7	99.5	7.8	79.2	79.6	△1.6	20.8	13.6	16.9
- 법인세	58.5	55.5	11.0	41.8	71.5	75.3	65.5	13.2	54.9	83.7	2.2	13.1	12.3	8.4
- 부가가치세	64.6	64.9	△2.6	45.8	70.9	70.6	69.3	△3.2	54.1	78.0	△0.7	8.3	7.1	7.4
- 교통세	15.5	13.9	1.4	10.1	65.4	72.6	15.7	1.4	11.7	74.3	0.0	1.6	8.9	1.7
- 관세	7.7	7.1	0.5	4.4	57.4	62.7	8.3	0.8	5.6	66.6	0.3	1.1	9.2	3.9
- 기타	37.2	41.8	3.6	26.4	71.0	63.2	46.2	3.9	34.8	75.4	0.3	8.5	4.4	12.2
○ 특별회계	7.8	9.3	0.6	5.6	71.5	60.4	9.6	0.6	8.0	82.9	0.0	2.4	11.5	22.5
◇ 세외수입	29.1	26.9	1.6	17.6	60.6	65.5	29.3	1.7	19.5	66.6	0.1	1.9	6.0	1.1
◇ 기금수입	161.9	166.2	11.8	107.6	66.5	64.7	171.0	14.3	129.7	75.8	2.5	22.1	9.4	11.1
(사보기금*)	95.8	100.0	7.7	64.5	67.4	64.6	99.5	9.4	84.1	84.5	1.7	19.5	17.1	20.0

* 국민연금기금,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기금, 고용보험기금,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

□ **(총지출, 427.3조원)** 2차 추경사업 본격 집행 등 적극적 집행노력에 따라 진도율(70.6%)은 전년동기대비 +0.6%p 증가(+38.6조원)

- 기금(68%)은 예산(71.3%)에 비해 진도율이 낮으나, 이는 구직급여 수급자 감소* 등 고용시장 회복세**에 따른 고용여건 개선에 기인

* 구직급여 수급자(만명) ('21.4)73.9 (5)70.4 (6)69.3 (7)67.9 (8)64.7

** 취업자 증감(전년비, 만명) : ('21.3)31.4 (4)65.2 (5)61.9 (6)58.2 (7)54.2 (8)51.8

실업자 증감(전년비, 만명) : ('21.3)3.6 (4)△2.5 (5)△13.0 (6)△13.6 (7)△21.8 (8)△12.0

- 민생안정과 직결되는 ①코로나 피해지원 3종 패키지, ②일자리 및 취약계층 지원, ③코로나19 방역 관련 사업을 중심으로 적극 집행

① 2차 추경사업의 코로나 피해지원 3종 패키지는 철저한 사전 준비를 바탕으로 10.6일까지 총 4,679만명(총계)에게 14.8조원 지급

- 상생국민지원금(11.0조원)은 4,218만명에게 10.6조원(96.0%) 지급*

* 10.6일 기준, 국비 8.6조원 및 지방비 2.4조원을 포함

· 저소득 추가 국민지원금(0.3조원)은 대상자 281만명(94.9%)에게 지급완료(0.3조원)

- 소상공인희망회복자금(4.2조원)은 180만명에 3.9조원(93.3%) 지급

· 소상공인 손실보상(1.0조원)은 세부지침을 발표(10.8), 10.27일부터 신청을 받아 최대한 신속히 지급 예정

- 상생 소비지원금(0.7조원)은 10~11월 카드 사용액이 2분기 월평균 사용액보다 3% 이상 증가 시 11.15일, 12.15일에 캐시백 지급 예정

※ 1차 추경 주요 현금지원 사업 집행실적('21.8월말)

1차 추경	예산	지급액	지급인원
주요 현금지원 사업	5.5조원*	5.3조원	(377만명)
버팀목자금 플러스+	4.9조원	4.8조원	(291만명)
긴급고용안정지원금	0.5조원	0.5조원	(72만명)
법인택시기사	560억원	560억원	(8만명)
방문·돌봄 종사자	309억원	309억원	(3만명)
전세버스기사	245억원	245억원	(3만명)

* 지원자 사후관리 및 인건비, 전산운영비 등 0.2조원은 순차적 집행

② 고용안정, 취약계층 지원 등 민생안정 분야 적극 집행

- 항공업·여행업 등 경영위기를 겪는 5.4천개 특별고용지원 사업장의 근로자 9.6만명에 대한 고용유지 지원(0.4조원)
- 독거 등 일상생활 영위가 어려운 취약노인에 대해 맞춤형돌봄 서비스 제공(47.6만명, 0.4조원),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(77.5만명, 1.3조원)
- 다함께 돌봄센터(539개소), 초등돌봄 교실(6,179개교) 등 온종일 돌봄체계 추진을 통해 돌봄 사각지대 해소 적극 추진

* 초등돌봄 이용 아동 ('17) 33만명 → ('21.4월말) 44.2만명

③ 단계적 일상회복 여건 마련을 위해 방역 관련 사업 적극 집행

- 코로나 백신접종 확대(10.10일 기준, 1차 접종율은 77.7%, 접종완료율은 59.3%)로 11월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방역여건 개선
- 감염병 전담병원 의료인력 인건비 지원(0.1조원), 전국 402개 의료기관에 손실보상 지급(2.4조원) 등 코로나 재확산으로 업무량 급증에 어려움을 겪는 의료기관 지원 강화

(단위: 조원, %, %p)

	'20년						'21년(잠정)				전년동기대비		
	추경 (A)	결산 (B)	8월 (당월 C)	8월 (누계 D)	진도율		2차 추경 (G)	8월 (당월 H)	8월 (누계 I)	진도율 (J=I/G)	증감		진도율 (J-E)
					추경 (E=D/A)	결산 (F=D/B)					8월 (H-C)	누계 (I-D)	
◇ 총지출	554.7	549.9	32.7	388.7	70.1	70.7	604.9	49.7	427.3	70.6	17.0	38.6	0.6
○ 예산	377.5	374.4	21.3	277.2	73.4	74.0	409.7	32.8	292.3	71.3	11.5	15.1	△2.1
- 일반회계	323.5	320.8	18.8	237.9	73.5	74.2	348.8	30.5	247.4	70.9	11.8	9.5	△2.6
- 특별회계	54.0	53.6	2.5	39.3	72.8	73.3	60.9	2.3	44.9	73.8	△0.2	5.6	1.0
○ 기금	177.3	175.2	11.4	111.4	62.8	63.6	195.2	16.9	132.6	68.0	5.5	21.3	5.1
(사회보장성기금)	61.2	59.1	5.1	39.4	64.5	66.7	63.2	5.3	43.7	69.1	0.2	4.3	4.7
○ 세입세출외*	-	0.4	0.0	0.1	-	33.6	-	0.0	2.4	-	△0.0	2.2	-

* 자치단체 교부금 정산 등

- **(재정수지)** 국세, 기금 자산운용수익 등 총수입 개선흐름 지속으로 8월말 재정수지 적자는 전년동기대비 58% 감소
(‘20.8월 △70.9 → ‘21.8월 △29.8조원, +41.1조원)

(단위: 조원, %, %p)

	'20년						'21년(잠정)				전년동기대비		
	추경 (A)	결산 (B)	8월 (당월 C)	8월 (누계 D)	진도율 추경 (E=D/A)	결산 (F=D/B)	2차 추경 (G)	8월 (당월 H)	8월 (누계 I)	진도율 (J=I/G)	증감 8월 (H-C)	누계 (I-D)	진도율 (J-E)
◇ 총수입(A)	470.7	478.8	37.4	317.8	67.5	66.4	514.6	40.6	397.5	77.2	3.2	79.7	9.7
◇ 총지출(B)	554.7	549.9	32.7	388.7	70.1	70.7	604.9	49.7	427.3	70.6	17.0	38.6	0.6
◇ 통합재정수지 (C=A-B)	△84.0	△71.2	4.7	△70.9			△90.3	△9.1	△29.8		△13.8	41.1	
◇ 사회보장성 기금수지(D)	34.6	40.8	2.6	25.1			36.2	4.1	40.4		1.5	15.2	
◇ 관리재정수지 (E=C-D)	△118.6	△112.0	2.1	△96.0			△126.6	△13.2	△70.2		△15.3	25.8	

- **(국가채무)** 1~8월 국고채 발행액은 140.0조원으로, 年발행한도 (186.3조원)의 75.1%를 안정적으로 소화

※ 8월 중앙정부 채무는 927.2조원(국고채 832.7, 주택채 81.3, 외평채 10.1 등)
2차 추경예산 기준 '21년 중앙정부 채무 전망치 : 937.8조원

- 특히, 외국인의 국고채 투자는 우리경제 안정적 펀더멘탈 등에 힘입어 크게 증가하며 9월 중 보유 잔액 기준 150조원 최초 돌파, 외국인 국고채 보유비중도 18.6%로 역대 최대 수준

* 外人 국고채 순투자(조원) : ('17)+5.3 ('18)+8.4 ('19)+12.0 ('20)+23.3 ('21.1~9)+33.0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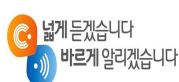
外人 국고채 보유잔액(조원 기말): ('17)77.8 ('18)86.3 ('19) 98.3 ('20)121.6 ('21.9월) 154.6

** 外人 국고채 보유비중(% 기말) : ('17)14.2 ('18)15.2 ('19) 16.1 ('20) 16.7 ('21.9월) 18.6

- 1~8월 국채 조달금리(1.71%)는 글로벌 통화정책 정상화 기대 등에 따른 시중금리 상승 영향으로 전년대비 소폭 상승하였으나, 과거 평균 대비로는 낮은 수준

* 국고채 조달금리(%) : ('16~'19 평균)1.96 ('20)1.38 ('21.1~8월)1.71

<붙임> 월간 재정동향 및 이슈 2021년 10월호(배포용)



기획재정부 대변인

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moefpr@korea.kr



※ 기고문을 자체 요약한 자료이며, 전체본은 「월간 재정동향 및 이슈 10월호」(붙임)에 게재

① 노후소득보장체계 혁신을 위한 중기재정운용 방향 (이태석 한국개발연구원 공공경제연구부 연구위원)

- (현황)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제도들은 완비되어 관련 지출은 지속 확대중이나, 실질적 노후소득보장은 충분하지 못한 실정
 - 다양한 공적·사적 연금 도입*을 통해 노후보장체계를 마련, 주요사업 지출은 5년간 연평균 10%로 빠르게 증가
 - * 국민연금(1988), 개인연금(1994), 퇴직연금(2005), 기초연금(2014) 등 순차적 도입
 - 다만, 노인빈곤율*은 여전히 OECD 최고 수준, 코로나 19 충격에 따른 취약계층 소득감소 등으로 노인빈곤문제 심화
 - * 65세 이상 노인빈곤율('18년 기준) : (한국) 43.4% (OECD 평균) 15.7%
- (개선방향) 효과적 노후소득보장을 위해 민간의 자구적 노력을 토대로, 정부는 소득취약계층의 노후소득 보완에 집중할 필요
 - ① (기초연금) 노후소득보장 강화를 위한 기초연금 지속 지원 및 고령인구 증가에 따른 기초연금의 재정부담 관리 필요
 - ② (국민연금) 보험료 부과 및 징수 노력 강화와 소득취약계층 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 병행 필요
 - ③ (퇴직연금) 실질적 소득보장 확대를 위한 정책적 지원과 연금시장 경쟁 조성·투명성 강화 등 병행
- (시사점) 개별 연금별 제도개선을 전제로 재정지원 강화 및 관련 규제 병행 ⇒ 중장기적으로 종합적 연금개혁이 되도록 유도
 - 노후소득보장체계 혁신이 노동시장, 자본시장 등의 전반적 제도 개혁과 원만하게 연계*될 수 있도록 설계 필요
 - * 기대여명 증가에 따른 노동시장 참여기간 연장 필요성과 연금제도 확대에 따른 노동시장 참여 유인 저하 간 조정

② 디지털·저탄소 경제전환으로 인한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노동전환 정책 (김승택 한국노동연구원 부원장)

- (논의배경) 디지털·저탄소화에 따른 산업구조 변화로 노동시장 수요가 크게 변화 → 노동안전망 재편 논의 필요
 - 디지털 분야 비중이 높아지며 저숙련 근로자에 대한 노동수요 감소, 코로나 위기는 비대면·온라인 산업으로의 전환 촉진
 - 저탄소화 이행과정에서 축소 또는 전환되는 에너지·제조 산업의 기업 퇴출, 근로자 실업, 지역경제 침체 등 피해 가능성
- (해외동향) 재직자 및 구직자의 디지털 역량강화를 지원하고, 저탄소화로 직접 피해받는 석탄발전 산업 중심으로 지원체계 구축

디지털화	미국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재직자 디지털 기초교육 및 고급인재 양성 방안 발표 * 'Computer Science for All'('16), 'Federal 5-year STEM Education Strategic Plan'('18), 'American AI Initiative'('19)
	일본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(기업) 사업재구축 촉진 지원 + (근로자) 디지털 인력양성 * 중소기업 대상 '사업재구축 보조금' 지원('21.3~, 1조 2억엔 규모)
저탄소화	EU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'50년까지 온실가스 제로 경제 전환을 목표로 향후 10년간 1조 유로 투자 등의 내용을 담은 '유럽 그린딜 투자계획' 발표('20.1) * 감축업종 종사자에 직업훈련 및 재교육 기회 제공, 탄광지역 복원 지원
	독일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'38년까지 석탄화력발전소 퇴출을 위한 '탈석탄법' 제정('20.7) * 석탄화력발전소 근로자 대상 고용조정지원금 지급, 친환경 열병합 발전 지원, 온실가스 배출권 소멸조치 등 근거규정 마련

- (시사점)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하여 근로자 직무전환·전직 및 기업의 사업재편을 위한 정책적 노력 필요
 - 근로자가 재직중 디지털·신산업 직무전환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기업에 인센티브 제공
 - * 재직자 유급휴가를 통해 재교육·훈련 기회를 제공한 기업에 고용보조금 지급
 - 불가피한 인력 조정 시 전직준비 및 재취업 지원 강화
 - * 전직 및 재취업 준비를 근로시간 단축 사유로 인정한 기업에 인건비 지원, 전직 훈련비 지원, 창업지원 프로그램 확대 등
 - 기업이 산업구조 변화에 사전 대응할 수 있도록 R&D 지원, 자금융자, 컨설팅 제공 등 사업재편·전환 지원

③ 미국의 최근 주요재정이슈 동향 (조세연)

- ① ('22년 예산안) '21년 대비 재정적자·지출규모를 감소시키나, 여전히 코로나 위기 이전 대비 큰 폭의 재정적자·지출수준 유지
< '22년 예산안 수정전망(OMB, '21.8월) >

(GDP대비%)	2019	2020	2021	2022	2023	2024	2025
총수입	16.3	16.3	18.0	18.0	18.9	18.9	19.0
총지출	21.0	31.2	31.8	24.8	24.0	23.9	24.3
재정수지	△4.6	△14.9	△13.8	△6.8	△5.1	△5.0	△5.2
총채무	79.1	100.1	105.0	104.3	104.8	105.6	107.0

- ① (주요내용) 인프라계획과 가족계획을 중심으로 국가 인프라 재건 및 생산성 증대를 위한 재정지원 강화

- (인프라계획) 도로·전력·수자원·통신망 등 인프라투자(약 \$1조)

- (가족계획) 사회안전망 확충 및 기후 관련 투자(약 \$3.5조)

* 현재 의회통과를 위해 지출규모를 약 \$2.3조 이하로 축소하는 방안 논의중

- ② (진행상황) '22회계연도 개시일('21.10.1일)까지 예산안 합의실패
→ 임시예산안 통과(9.30일)되면서 섰다운 리스크는 잠정해소*

* 임시예산안 만료시한(12.3일)까지 정부예산안 합의 필요

- ② (채무한도) 의회에서 현 채무한도를 \$28.9조(+\$.48조)까지 인상하는데 합의(10.7일) → '21.12월까지의 지출여력을 확보

- ① (주요내용) 기존 채무한도는 '21.7월까지의 기발생 채무 \$28.4조
→ 한도 증액 또는 유예 없이 추가채무 불가하였던 상황

- ② (진행상황) 당초 채무한도 유예기간인 '21.7월까지 한도 증액에 실패함에 따라 자금조달을 위한 신규 채권 발행이 제한

- 재무부는 여유자금 확보를 위해 특별조치*를 단행하였으나, 10.18일까지 한도 증액/유예 실패시 채무불이행 직면 우려

* 퇴직공무원·장애인 연기금 등에 대한 신규납부 유예 등

- 채무한도를 '22.12월까지 유예하는 법안이 하원 통과(9.21일), 다만 공화당의 지속적인 반대에 따라 상원 통과에 난항

- 공화당은 채무한도를 임시적으로만 유예하는 대안을 제시
→ 채무한도 \$28.9조(+\$.48조)까지 인상하는데 합의(10.7일)

4 국유재산 가치 제고를 위한 2022년 국유재산 관리 정책 방향 (강대현 기획재정부 국유재산정책과장)

□ 민간·지자체 협력을 통한 국유재산 개발

- (민간참여개발 활성화) 민간참여개발(11년 도입) 제도를 시장 친화적으로 개선,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다양한 사업 추진 지원
→ 금년 말 제도개선* 내용을 담은 국유재산법 개정안 국회 제출
* 개발가능 국유재산 범위 확대(5년이상 미활용 일반재산 → 전체 일반재산 등), 국가 출자한도 확대(현금출자만 30% → 현물출자 포함 50%) 등
- (국유지 장기대부 시범사업) 국유지 위탁개발 사업지 중 일부를 민간에 50년간 長期대부하여 업무·상업시설 등의 개발 유도
* (국가) 양질의 국유지를 계속 소유, (민간) 대부기간 중 시설 운영수익 창출
- (지자체와 협력) 지자체와 협력하여 기존 청·관사 복합개발의 범위 확대* 및 지역의 거점시설(귀농·귀촌, 관광 등) 조성 지원
* (기존) 청·관사 + 상업시설 + 공공주택 등 → (개선) 주민체육시설 등 생활SOC 추가

□ 수요자 중심의 국유재산 활용

- (정책현안 뒷받침) 2050탄소중립*, 주택공급**, 소상공인 대책*** 등 당면 현안을 뒷받침하여 국유재산의 공익적 기능 확대
* 수소충전소 부지 발굴, 공공건축물 신축 시 제로에너지 빌딩 선도 도입
** 토지개발사업 15곳, 청·관사 복합개발 16곳 추진 중
*** 임대료 인하, 임대료 납부유예, 연체료 경감 등 국유재산 사용부담 완화
- (사용자 편의 제고) 국유재산 사용자의 불편사항을 적극 해소 하기 위해 금년 말까지 국유재산법령 개정* 등 추진
* 사용료 분할납부 횟수 확대(6→12회), 매각대금 분할납부 기준 하향(1천만원→5백만원) 등

□ 국유재산 관리 내실화

- (활용가치 제고) 국유재산 가치의 합리적인 평가*, 보유 필요성이 낮은 재산** 적기 매각 등 체계적인 재산관리로 활용가치 제고
* 국유재산 전면 재평가(21회계연도 결산) 등, ** 자투리 토지, 사인건물 점유지 등
- (관리기반 강화) 차세대 국유재산관리시스템(22.1월 운영 개시) 활용, 총괄청 중심 관계부처 협의·조정 강화 등 관리체계 개선

[5]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 개편방안 주요내용과 시사점 (류형선 기획재정부 평가분석과장)

- (개편배경) 제도 도입(‘84) 이후 38년 경과 → 다양한 의견수렴* 등을 거쳐 현행 평가제도를 전면 재검토하여 근본적 개편방안 마련(8.31)

* 제도개선 T/F 운영(‘21.7~8), 전문가·일반국민·공공기관 대상 간담회, 토론회 등 개최

- (주요내용) 국민이 신뢰하는 경영평가제도로 전면 개편 추진

- 현행 한시적·비체계적 평가를 상시적·전문적 평가관리체계로 전환
 - 평가자료 DB화 및 평가과정 전산화를 위한 평가정보시스템 구축
 - 평가단內 평가검증단 신설, 다단계 외부검증장치 마련(①공공기관 연구센터, ②평가대상기관, ③검증위원회(평가검증단·기재부·센터)에 의한 검증)

- 기관 경영개선에 연계되도록 컨설팅 강화 및 경영개선노력 평가 반영
 - 기관의 다양한 수요에 상응하는 맞춤형 경영컨설팅*을 강화하고, 개별 기관의 실적 개선도를 경영평가 및 성과급 산정시 반영
 - * 신설기관 평가결과 실적부진기관(D·E등급), 구조적 문제기관(3년 이상 연속 D·E등급) 등

- 국민과 공공기관이 공감하는 국민체감형+기관맞춤형 평가 도입
 - 윤리경영 지표의 배점을 확대(3→5점)하고, 공기업 기관장·임원의 성과급 지급률 상한 하향조정*

* 기관장 : 기본연봉 대비 120% → 100%, 임원 : 100% → 80%

- 지표 정비, 소규모기관 평가 간소화 등을 통해 평가부담 완화
- 평가제도 개편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평가추진 조직·인력 정비
 - 우선 현행 조세연 공공기관연구센터를 전문적인 평가지원조직으로 보강·재편하고, 향후 평가전담조직 신설도 단계적 추진 검토

- (시사점) 금번 개편을 통해 평가의 전문성·책임성·수용성 제고 전망

- 평가오류 발생 방지와 함께 수요자 중심의 평가, 기관의 실질적인 경영·역량 개선에 도움이 되는 평가로 전환 추진